

[종합·해설]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 선대본부장회에 참석한 신당 지도부의 표정이 심각하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의 이명박 후보 BBK 무혐의 처리설을 놓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김종민 후보 ‘동구 비전’ 발표 김조순 후보 용봉동 아파트 돌며 거리 유세

12·19 재·보선 현장

○ 광주 동구 제1선거구 광주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4일 차질 없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 도심 공영 주차장 확대, 특화거리 조성 등 ‘대 동구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권역별 문화 인프라 구축, 저소득주민·장애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건강도시 동구 건설, 지역별 청소년도서관 및 학원타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

으로 만들어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겠다”며 “시의원 경험을 살려 낙후된 동구를 명실상부한 호남의 수도로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주시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조순 후보는 4일 북구 용봉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지방정치의 기본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봉사와 헌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편에 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호기자 who@kwangju.co.kr

18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8,6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천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억7천만원, 비례 12억6천900만원) 때에 비해 지역구 후보자는 9.4%인 1천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0.5%인 1억3천300만원이 들어난 것으로, 2004년 대비 인구 및 물가변동을 증가분을 반영해 산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검찰 오늘 BBK 수사결과 발표… 긴장하는 정치권

“헛방 잔치” “특검 발의”

‘한방이나 헛방이나’

5일 발표될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놓고 여의도 정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연루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 의혹 ▲주가조작 개입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후보는 치명상을 입으면서 대선구도는 일거에 국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결백이 드러난다면 이명박 후보는 ‘대세론’에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대선 승리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후보의 BBK 실소유와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 없음’, 또는 “증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기로 다스 실소유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계속 조사하겠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관련 의혹 및 예상 검찰 수사결과

핵심 사건/사항	이 후보 관련 의혹	예상 검찰 수사결과
BBK 실소유주	이 후보가 직접 설립하고 지배했다	이 후보의 직접 관계성 없음
주가조작 논란	이 후보가 자금을 유용하고 주가조작에 개입 풀증 없음	관련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이 후보는 다스를 처벌로 보유했다	명확한 구명 없이 계속 수사 방침

아전인수격 해석

여야 공방 가능성

다”는 식으로 이정쩡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가급적 피하려는 검찰의 생리상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될 경우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나라당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무혐의’라고 규정하고 대대

적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경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방은 끝내 터지지 않았으며 헛방 잔치로 끝났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역전 흘린은 커녕 정동영 후보와 이 회장 후보를 모두 날리는 병살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당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당은 또 BBK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 미진을 문제 삼아 특검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검찰이 권력에 출서기를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며 “만약 이명박 후보에 대해 ‘혐의의 없음’이라는 발표가 나올 경우, 즉각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여수엑스포, 지금부터 시작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여수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때의 흥분과 기쁨은 여전한 듯하다.

지난달 30일에는 여수 현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수박람회 유치의 주역들이 참가한 가운데 ‘박람회 유치 성공 범국민 보고대회’가 열린 것을 비롯 전남도 내 곳곳에는 여수의 박람회 유치 확정 소식을 알리고, 기뻐하는 각종 행사와 플래카드, 홍보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전남과 여수를 대표해 박람회 유치에 올인했던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 공무원들은 “여수 박람회 개최로, 30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도시 개발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여수 앞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대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오는 2012년 5월까지는 4년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제부터는 차분한 마음으로 ‘효과적인 박람회 개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19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3개월간의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관람객 795만 명, 생산유발효과 10조 원, 고용유발효과 9만 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사업인 만큼 여수와 전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할 ‘(가칭)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이 참여 정부 임기 내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과 동시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박람회라는 거대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여수박람회는 넓게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수가 동북아 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전남 남해안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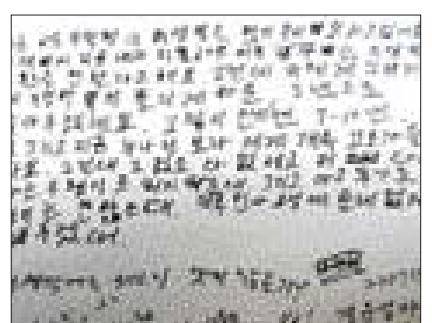
지역민들은 이제 박람회 유치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종양정부와 힘을 합쳐 더욱 치밀하게 박람회를 준비해야 한다.

박람회를 유치하려 했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박람회 유치활동 당시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redplane@kwangju.co.kr

‘김경준 메모’… BBK 전쟁 ‘2라운드’

“이명박 빼면 3년” 김경준에 형량 거래 의혹… 파문 예상



“이명박 빼면 3년” 김경준에 형량 거래 의혹… 파문 예상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김경준씨에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하면 구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4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경준씨는 현장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인 지난달 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어머니 김영애씨와 장모를 만나 메모(사진)를 건네 주었다는 것

이 메모지에서 김씨는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 안 하려고 해요”라며 “그런데 저에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며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이명박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하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의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김씨는 “그렇지 않으면(이명박 후보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7~10년. 그리고 지금 누나랑 보라에게 계속 고소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 무혐의로 처리해 준대”라고 쓰고 있다. 이 메모지 아래 편지에는 김씨의 장모가 “내 생각에는 3년이 낫지 않을까?”라고 쓴 대목도 들어 있다.

김경준씨의 가족들은 이 메모지 등을 근거로 이번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편파

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누나 예리카 김 변호사는 이날 “검사들은 이명박씨가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서 수사가 안 되니 기소할 수 없도록 동생을 설득했다. 동생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3년을 구형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리카 김 변호사는 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월셔프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편파수사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는 절차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이 녹음·녹화돼 있고 김씨의 변호사도 매번 입회를 했기 때문에 눈곱 만큼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담당부장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